

법원

소식

제 11호
12月

2022年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한눈에 보기

I. 「사법보좌관 제도와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현안과 쟁점」 학술대회 개최	01
II. 영상재판 확대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02
III.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현황과 과제 (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 국제 콘퍼런스 개최	04
IV.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방안 양형위원회 회의	08
V.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11
VI.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실시	13
VII. 오석준 대법관 취임	13
VIII.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23차 회의(임시회의) 개최	14
IX.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3 「법관의 길 손지열」 발간	15
X. 김명수 대법원장, 제1회 아세안플러스 대법원장회의 화상 참가	16
XI. 김명수 대법원장,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화상 참가	17

I. 「사법보좌관 제도와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현안과 쟁점」 학술대회 개최

- 사법정책연구원은 2022. 11. 4.(금)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사법보좌관 제도와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함
- 이번 학술대회는 법원공무원 관련 제도 및 실무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는 2005년 도입 이래 점차 역할이 확대되어 온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2022. 12. 9.부터 시행될 예정인 형사공탁 특례의 실무상 쟁점의 두 가지 주제를 살펴봄

■ 제1주제 : 재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법보좌관 제도 운영 방안

- 사회 : 김윤선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
- 발표 : 권혁민 강의심의회관(사법연수원, 법원서기관)
 -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법관의 업무가 과다하고, 탄력적인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이 쉽지 않은 점, 상속포기·한정승인 업무의 이관에 따른 사건처리기간 단축 성과 등을 소개하며, 사법보좌관 업무영역 확대의 필요성 및 구체적 확대 방안을 소개
 - 쟁송성이 약한 사건(보전처분의 담보취소, 재산명시, 급여소득자의 개인회생절차,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 사건의 약식절차 등)의 추가적인 업무 이관을 제안함과 아울러, 사법보좌관 명칭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
- 토론
 - 정승연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사법보좌관 업무영역 확대에 수반하는 증원 및 교육의 문제를 지적함과 아울러, 현재의 개인회생절차 중 법관이 관여하는 부분은 쟁송성이 강하여 사법보좌관에게 이관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음을 지적
 - 김세진 변호사(법무법인 민행)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법보좌관 직위의 외부(변호사·법무사 등) 개방과 직무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함
 - 황정수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는 쟁송성 있는 업무 중에서도 임시적·일차적 재판이나 재량의 여지가 없는 재판업무는 사법보좌관에게 이

관할 수 있으며, 법무사에게 사법보좌관 업무에 대한 신청대리권을 인정하자고 제안함. 아울러 사법보좌관 명칭의 대안으로 ‘사법심판관’ 등을 제시

- 신홍기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법원서기관)는 사법보좌관 장기근무를 위한 평정 및 승진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관하더라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업무의 이관에는 신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 제2주제: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실무상 쟁점

- 사회 : 김윤선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
- 발표 : 박미정 연구담당관(사법정책연구원, 법원사무관)
 - 형사공탁특례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개정 공탁법 및 입법예고된 공탁규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함
 -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과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번호 등을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음 ⇒ 공탁관은 공탁사실을 인터넷에 공고하고 해당 형사사건의 담당 법원 및 검찰에 공탁사실을 통지 ⇒ 피해자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금
 - 공탁관의 통지와 별도로, 공탁사실을 양형사유로 참작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지적
 - 또한, 피해자에 대한 공탁사실 안내 및 공탁금 출금을 위한 동일인 확인증명 발급은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담당하는 것을 제안함
 - 나아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제출 의무화, 공탁관련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에 참작하지 않는 범죄군의 설정, 불확지공탁의 허용 여부, 피해자를 위한 대행출급절차 마련 등 향후의 과제를 제시함
- 토론
 - 최승호 판사(춘천지법 속초지원)는 공탁관의 법원 및 검찰에 대한 공탁사실 통지와 별도로 피고인의 공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할 수 있고, 또

- 한 형사공탁을 참작하지 않는 범죄군의 설정이 형사공탁제도의 실효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지적함
- 손영현 변호사(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한하여 형사공탁을 허용하여야 하고, 공탁통지는 양형사유로 참작하며, 공탁금 출급을 위한 동일인 확인은 검찰에서 담당함이 적절하다고 지적함
 - 장용석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공탁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공탁과 기존 형사변제공탁의 차이점, 현재 공탁예규 준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공탁자를 위한 제도 안내와 수사기

관과의 업무연계를 통한 출급절차 간소화의 필요성 등을 지적함

■ 총평

- 이번 학술대회는 유튜브(www.youtube.com) 「사법정책연구원」 채널과 아울러 최근 신설된 법원 TV(tv.scourt.go.kr) 채널을 통하여 생중계되었고, 그 동영상은 위 채널들에 게시, 공유할 예정임
-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좋은 재판을 위한 법원 공무원의 역할에 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II. 영상재판 확대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 법원행정처는 2022. 11. 18.(금)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에서 「영상재판 확대와 국민의 사법접근성」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재판 확대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 심포지엄 개최 의의

-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개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2022. 11. 18. 시행)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시점에, 그간의 제도 시행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 심포지엄 세부 일정

시간	진행 내용	비고
15:00 ~ 15:20	개회사·축사 - [개회사]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 [축사] 최기상 국회의원 - [축사] 유상범 국회의원	진행: 박광선 민사지원제1심의관(판사)
15:20 ~ 15:30	기념촬영	

시간	진행 내용	비고
15:30~ 16:00	[제1주제] 영상재판 확대 법률에 따른 준비 경과 및 시행 성과 - 발제: 유아람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장	좌장: 정상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16:00~ 16:30	[제2주제]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영상재판의 다양한 활용 방안 - 발제: 경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6:30~ 17:10	지정토론 - 김민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 한애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희동 검사(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 박수연 기자(법률신문) 종합토론 (현장 질문, 유튜브 댓글에 대한 답변)	좌장: 정상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17:10 ~ 17:15	폐회	진행: 박광선 민사지원제1심의관(판사)

□ 심포지엄 주요 발표 내용

■ 영상재판 신청 및 실시건수 현황

- 개정 법률 시행 후의 통계(기간: 2021. 11. 18. ~ 2022. 10. 31.)

-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재판신청서 누적 접수건수: 4,071건(※ 2021년 12월에는 124건이었으나, 2022년 10월에는 733건으로 급증)
- 영상재판 누적 실시건수: 영상기일 4,226건, 영상신문 398건(※ 2021년 12월에는 영상기일 97건, 영상신문 13건이 실시되었으나, 2022년 10월에는 영상기일 625건, 영상신문 55건이 실시됨)

■ 2022년 9월 법원행정처 실시 설문조사 결과

-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443명 참여)
 - 영상재판에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11.4%,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40.4%로 나타남
 - 영상재판의 장점으로 사법접근성 제고(44.1%), 신속한 재판(31.3%), 충실한 기일 진행(15.5%)을 꼽음
-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313명 참여)
 - 영상재판에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23.6%,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23.0%, 보통이라는 답변이 37.7%를 차지하여 영상재판에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상재판 전용법정 설치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3층 363호 사건기록 보관창고를 구조 변경하여, 2022. 10. 전국에서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준공하였음
- 합의부가 영상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3인실 법정 2개소, 단독재판부가 영상재판을 진행하거나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이 영상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1인실 4개소, 외부인들이 영상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방청실 1개소로 구성

■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영상재판 활용방안

-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 예: 법원청사 내 화상증언실을 이용한 영상증인신문,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찾아가는 영상 법정(피해자 희망장소에서의 증언)
- 국내 거주 원거리 증인에 대한 신문
 - 예: 도서지역 영상증인신문(백령면사무소 소회의실에 중계시설 설치 완료)
- 외국 거주 증인에 대한 신문(국제영상증인신문)
 - 예: LA 총영사관에서의 재외국민 영상증언

□ 심포지엄 주요 토론 내용

■ 한애라 교수

- 외국 소재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함에 있어,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이나 양국 간 사법공조조약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히 점검할 필요 있음

■ 김민규 변호사

- 비대면 활동은 대면 활동에 비하여 부정·부실이 개입될 여지가 큰 점, 영상재판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상재판 실시 시에는 각종 절차 운용을 철저히 할 필요 있음

■ 이희동 검사

- 국제영상증인신문 시 증인 소재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영상증인신문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영상재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음

■ 박수연 기자

- 영상재판 활성화가 사법접근성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가 큼. 다만, 영상재판 프로그램 구동 시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는 점, 영상재판 실시 시 몰래 화면을 녹화·녹음하거나 제3자가 사각지대에서 조연이나 협박을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Ⅲ.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현황과 과제」(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 국제 콘퍼런스 개최

□ 개요

-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2. 11. 28.(월)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현황과 과제(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음

□ 행사 개요

- 개회식 및 기조연설
 - － 개회사: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 － 축사: 김명수 대법원장
 - － 영상축사: Carlton W. Reeves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위원장
William Davis 영국 양형위원회 위원장
 - － 기조연설: 천대엽 대법관
- 제1주제 「양형 합리화 방안의 현주소(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세계 각국의 양형 합리화 방안(Systems for Reasonable Sentencing Worldwide)-」
 - 세계 주요 국가에서 그동안 양형의 합리화를 위하여 추진하여 온 주요 방안을 살펴본 후 그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
- 제2주제 「양형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Reasonable Sentencing: Future Challenges)」
 - － 제1세션: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객관화(Assessing Recidivism Risk Objectively)
 -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합리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논의
 - － 제2세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 산업재해 등 법인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외국의 사법제도와 양형정책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토론

□ 발표 및 토론내용

- 제1주제 「양형 합리화 방안의 현주소(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사회: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① 최승원 고법판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양형기준 제도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of Implementing Sentencing Guidelines System)」라는 제목으로 발표

- －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뒤, 양형기준 제도 시행 성과로 ① 양형기준 설정 작업의 지속적 수행을 통한 양형기준 설정 범위의 확대, ② 양형기준을 존중하는 재판실무의 정착, ③ 양형 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④ 양형이유의 충실한 설명을 통한 재판의 설득적 기능 제고, ⑤ 양형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인식과 법감정의 반영을 들었음
- － 양형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① 양형기준의 체계적 일관성 확보, ② 집행유예 기준의 보완, ③ 양형기준 적용 현황의 지속적 분석과 양형기준의 수정, ④ 국민의 건전한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양형기준의 수정, ⑤ 양형심리의 활성화, ⑥ 양형조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제시함

② Julian ROBERTS 교수가 「The Evolu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with a focus on England and Wales(영국을 중심으로 본 양형기준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 － 비교법적 관점에서 양형기준제의 발전 상황, 영국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과 성과, 영국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의 과제 소개
- － 영국 사례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소개: ① 양형위원회의 다수가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고, 양형기준 설정에 판사들이 많이 관여하는 경우 양형기준은 사법부에 받아들여짐. ② 양형기준은 반드시 상당 수준의 사법적 재량을 허용해야 함. ③ 양형기준은 양형 결정의 투명성과 양형의 일관성을 향상시키지

만, 실행률, 재범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Matthew KLEIMAN 부국장이 「Data as the Lifeblood of Sentencing Commissions(양형위원회의 필수요소: 데이터)」라는 제목으로 발표

팬실베니아 주 양형위원회의 데이터 기반 양형정책과 실무를 소개함. 성공적인 양형위원회는 양형 편차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책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양형 정책과 실무'에 중점을 둔 객관적 기관이라고 강조함

④ 타노이 쿠라토 판사(일본 최고재판소 사무국 형사국원)가 「The Recent Trends of the Sentencing Practices in Japan(일본 양형실무의 최신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일본의 재판원 재판(Saiban-in Trials, 2009년 시행된 제도로 시민이 판사와 함께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는 제도, 우리의 국민참여재판과 유사)에서는 양형편차를 줄이고 양형의 적정성,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① 양형참고 시스템(Sentencing Reference System)을 구축하고, ② 양형 통계 그래프(Sentencing Graph)를 이용한다고 소개

⑤ KASPAR 교수가 「Systems for Reasonable Sentencing Worldwide - Recent Trends in Germany(세계 각국의 양형 합리화 방안 - 독일의 최신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 ① 독일의 양형 체계는 법적 안정성과 형벌의 예측가능성이 아닌 사법적 재량과 유연성에 중점을 둠
 - ② 양형기준이나 양형위원회의 도입을 포함한 양형법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결되었고,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독일에서 양형편차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 ③ 독일 학계는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구속력 없는 연방 양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도입에는 불투명성과 차별, 편향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많음
 - ④ 사건으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제시하는 실무자와 학자로 구성된 양형위원회가 독일에 도입되어야 하고, 한국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제2주제 「양형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Reasonable

Sentencing: Future Challenges)」

- 제1세션: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객관화(Assessing Recidivism Risk Objectively)
- (사회: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발표]

① Jörg KINZIG 교수가 「Assessing the Risk of Recidivism in Germany(독일의 재범 위험성 판단)」라는 제목으로 발표

- ① 독일의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따라 정해짐. 범죄전력은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만 고려됨
- ② 실증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지역별로 상당한 양형 편차가 존재함. 그러나 양형기준제는 채택되지 않음
- ③ 법관의 판단을 조력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사용에 대하여 우려하는 견해가 많음
- ④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 의견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 그러나 이에 대한 몇몇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함

② Melissa HAMILTON 교수가 「Assessing Recidivism Risk Objectively(재범 위험성의 객관적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

- ①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있음. 채택된 평가도구는 해당 지역의 실무 관행과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상황을 고려하여 그 지역 내의 인구에 적용하기에 유효적절하다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함. 이러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그 자체로 특정한 중요성을 갖거나 권고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고려할 증거의 하나임
- ②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사법시스템이 고위험의 사람들에게 수용시설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평가자의 개인적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며, 분석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 ③ 그러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에 오류도 존재함. 특히 개인 또는 집단의 재범 위험성 수준을 과대 또는 과소 예측하도록 하는 편향을 경계해야 함. 예컨대, 고용과 교육 수준에는 인종 및 계층적 편향이

내재되어 있음. 재범위험성에 영향을 주는 일부 요소는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정신병, 연령, 지역, 젠더 등). 또한 재범위험성은 고정된 것이 아님

[지정토론]

① 권미연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정토론 요지

- 독일과 달리 영미법 국가에서 위험성 평가도구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주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함: ① 영미법은 독일법과 달리 책임원칙에 근거한 형벌과 예방목적에 근거한 보안처분을 명백히 구별하지 않는 형사제재 체계를 가지고 있음. ② 미국은 독일에 비해 높은 범죄율과 이로 인해 과밀화된 교도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컸음. ③ 피고인에 대해 재범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임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영국과 미국에서는 유무죄 심리와 양형심리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유무죄 판단이 끝난 후 양형심리에서 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하는데 부담이 적었을 것임.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작성되는 판결전보고서에 피고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결과가 포함될 수 있음
- 통계적 방식에 기초한 위험성 평가도구는 양형에 관한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 중 하나인 것이지만 법관의 판단 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 법관으로서 여전히 그 평가결과를 다른 요소와 종합하여 구법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
- 결국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객관화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fairness)의 문제임

② 김도희 검사(광주지방검찰청)의 지정토론 요지

- 수사 단계에서도 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 ② 특정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여부, ③ 심신장애 상태,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피의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범위험성 판단이 필요함
- 검사가 수사 중 피의자의 '재범위험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청구 전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에서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PCR-L과 KORAS-G를 활용하여 결과를 회신하기도 함

- 독일 및 영미의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형집행 이후 재범위험성 판단에 관하여 질의

③ 장진환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지정토론 요지

- 현재 세계 대부분의 법률은 법관이 전문가의 재범위험성 판단을 참고하도록 할 뿐이지, 전문가의 판단 결과에 구속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의 내용은 타당함.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
- 전문가의 평가가 법관의 평가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혹은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법관의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재범위험성이 판단되면 안 됨
- 재범위험성 판단 과정에서 검사나 법관에게 요구되는 구체적 능력과 고려 요소가 무엇인지, 위험성에 대한 과대평가의 이유와 방지대책을 질의
- 제2세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사회: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① Brandon GARRETT 교수가 「Lessons from Organizational Sentencing in the United States(미국의 법인 범죄 양형이 주는 교훈)」라는 제목으로 발표

-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의 법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판사로 하여금 법인의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 사형 조항(corporate death penalty provision)'과 함께, ① 효과적인 준법윤리경영 프로그램(an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② 자율 신고, 협조 또는 책임의 수용(self-reporting, cooperation or acceptance of responsibility)을 통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당근과 채찍' 접근방식을 채택
- 법인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처벌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이를 통제하기 위한 미국 기소협상 실무는 법인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음 → 법인의 법규준수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중요함

② 김웅재 교수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해설론(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South Korea: Doctrinal Analysis of Joint Penalty Provisions)」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 현행법상 법인 형사처벌의 실정법상 근거는 개별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양벌규정들인데,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음
- 현행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형사처벌의 규율방식은, ①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책임과 ② 대표자 외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감독책임의 이원적 체계로 해석할 수 있음
- 행위책임과 감독책임을 양형에 있어서도 차별 취급할 것인지, 감독책임의 요소인 감독과실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 향후 논의가 필요함

[지정토론]

Ⅰ 권보원 판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지정토론 요지

- 법인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어떤 행위가 범죄로 평가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함
- 회사불법 억지를 위해서는 법인 처벌 가능성을 무한정 열어 둘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영역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은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모두 큰 '중대사고형'에 집중함이 타당
- 형사절차에서 법인과 대표자를 동일시하게 되면 형사책임 성립(실체적 진실발견) 측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정의는 일정 정도 상대화되거나 무시될 수밖에 없음. 대표자와 법인의 이해관계가 언제나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사과 재판의 단계에서 법인에 대한 절차적 보장은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이 필요함
- 행위와 책임능력이 동시에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형사절차는 법인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음. 형법 총칙 등을 통하여 법인 처벌을 일반화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수단이나 자연인 행위자 처벌로는 불충분한 제한된 영역에 한하여 효과적으로 법인을 제재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

②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지정토론 요지

- 법인의 범죄에 대하여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논쟁사항이므로, 그 다음 단계로 논의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양벌규정은 형사정책적 의도에 의하여 개별 법률에서 특히 법인처벌을 목적으로 둔 예외규정에 불과할 뿐인데, 법인의 범죄능력을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책적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오늘날 법인은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고 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이를 발현함. 이 경우 반드시 법인의 범죄능력과 수행능력을 이원화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성이론으로, 종업원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음. 결론적으로는 법인 고유의 조직형태를 인정하고 이사회 등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의사결정능력으로 보고, 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행위능력으로 보아 법인의 독자적인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함

③ 김유근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지정토론 요지

-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는 구성원의 개인 책임에 상응하지 않음. 또한 기업활동에서 분업 및 아웃소싱은 일상적임 → 그렇다면 분업 및 아웃소싱에 의하여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다수인에게 분산되어 1인의 행위만으로 이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성 이론이 기능하는지, 대표자의 개인적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의 형벌만을 동일시되는 법인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문제됨
- 양벌규정의 법문언상 법인의 선임·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선임·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은 가중사유가 아니기 때문에(면책사유) 법인은 자연인의 본죄의 형으로 처벌됨. 따라서 양형의 여지도 그런 만큼 좁다고 생각됨
- 그밖에 입증책임의 문제, 미국의 경우 기업에 대한 기소 혹은 유죄담변협상은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기업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저조한 이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입증책임, 기업에 대한 벌금형에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 등을 질의함

□ 향후 계획

- 양형위원회는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루어진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 결과를 양형기준 및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의 개선과 발전에 활용할 예정

- 향후 비교법적 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한 해외 양형위원회 및 해외 사법부와의 교류도 지속할 예정임

IV.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방안 양형위원회 회의

■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2. 10. 21. 제120차 전체회의를 열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방안(설정범위, 유형분류)을 심의하였음

1. 요지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 아래에 해당하는 각 범죄를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대상에 포함

① 양형기준이 이미 설정된 교통범죄

- 교통사고 치사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위험운전 치사상(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 교통사고 치사상 후 도주/유기도주 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

※ 다만 법정형에 벌금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대상이 아님

② 양형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교통범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2) 교통범죄 양형기준 유형분류

- 범죄의 구성요건, 법정형, 형량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분류안을 정함

[01. 교통사고]

가.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2	교통사고 치사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2	위험운전 치사			

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어린이 치상			
2	어린이 치사			

[0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2	치상 후 유기 도주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03. 음주·무면허운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3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5	음주측정거부			

(3) 향후 일정

■ 양형기준 설정작업은 1) 양형기준 설정범위 결정 ⇨ 2) 유형분류 결정 ⇨ 3) 권고 형량범위 결정 ⇨ 4) 양형인자 결정 ⇨ 5) 집행유예 기준 결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1) 설정범위 및 2) 유형분류에 대하여 심의함

■ 향후 다음 일정을 거쳐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확정될 예정

- 2023. 1. 제122차 양형위원 전체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심의(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수정안 의결
- 2023. 1. ~ 2023. 2.: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 진행
- 2023. 3.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2. 주요 내용

① 설정범위 심의 결과

(1) 기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

-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징역형·금고형) ⇨ 포함

- 교통사고 치사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위험운전 치사상(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 교통사고 치사상 후 도주/유기도주 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양형기준이 이미 설정된 교통범죄의 벌금형 ⇨ 포함(법정형에 벌금형이 존재하는 경우)
 - 교통사고 치사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위험운전 치사상(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 교통사고 치사상 후 도주(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2) 양형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범죄

■ 가. 포함

- 범죄의 발생 빈도,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아래 범죄군에 대하여 징역형·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나. 제외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헌법재판소에서 단순 위헌 결정하여 효력 상실함
 -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 추후 설정여부 논의함이 적절
-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과실재물손괴(도로교통법 제151조)
 - 단일범인 경우에는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적음[구약식 사건은 아래와 같이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2022. 3. 28. 양형위원회 제114차 회의)]

5.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구공판 사건,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공판절차회부 사건 및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적용하되, 추후 약식절차와 즉결심리절차의 양형심리 방식 개선 상황, 양형자료조사 인력의 확충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용 범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 통상 인명 피해도 함께 발생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됨(상상적 경합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② 유형분류안 심의 결과

(1) 논의의 전제

- 유사한 특성을 가진 범죄를 같은 대유형으로 묶음
⇒ 양형인자 공통
-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를 같은 소유형으로 묶음 ⇒
형량범위 공통

(2) 대유형 분류

-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음주·무면허운전’의 3가지 대유형으로 분류

(3) 중유형 및 소유형 분류

- 교통사고(대유형1) 대유형은 교통사고의 세부 형태인 ①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② 위험운전 교통사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③ 어린이 교통사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로 중유형 분류
- 각 소유형은 법정형, 형량분포 및 행위태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01. 교통사고]

가. 일반 교통사고

(1)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1)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전문

(2) 제2유형(위험운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후문

다. 어린이 교통사고

(1) 제1유형(어린이 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2호

(2) 제2유형(어린이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1호

[0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나.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다.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라.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03. 음주·무면허운전]

가. 제1유형(무면허운전)

구성요건	적용법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나. 제2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성요건	적용법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다. 제3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성요건	적용법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라. 제4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라. 제4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③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제12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22. 12. 5. (월) 오후, 대법원 회의실
- 안건 : 관세범죄 양형기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양형기준의 설정 방안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양형기준 설정안 의결

V.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 대법원은 한동대학교 이지선 교수를 초청하여 2022. 11. 14.(월)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
- ‘지선아 사랑해’의 작가에서, 현재는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선 교수는 “조금 더 알게 되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장애의 개념,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 장애인에 대하여 가져야 할 바른 인식과 마음가짐, 태도 등에 대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함
 - 화상으로 인해 안면장애를 얻은 경험을 기초로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한 과정을 소개함
 - 장애의 개념으로서 의료적 모형(Medical Model)과 사회적 모형(Social Model)을 소개하고, 각 개념에 따라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음을 설명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소중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 유형의 다양성과 특징, 장애인에 대하여 가져야 할 바른 인식과 마음가짐, 태도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함
- 이번 교육은 사법부 구성원으로 하여금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음. 앞으로도 대한민국 법원은 장애인, 장애

인의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실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일시 및 진행방식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 11. 14.(월) 15:00 ~ 16:1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집합교육으로 진행

- 2019년 이후 3년 만에 집합교육으로 진행함

■ 참석자

-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모든 구성원

□ 강연자

- 이지선 교수(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 강연내용

- ‘지선아 사랑해’의 작가에서, 현재는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선 교수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심금을 울리면서도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강연을 진행함
- 화상으로 인해 안면장애를 얻은 경험을 기초로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한 과정을 소개함
- 현대사회에서 장애의 개념은 의료적 모형(Medical Model)에서 사회적 모형(Social Model)로 변화하였고,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손상된 것을 치료하고 제거하는 것에서 능력장애 사회적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고치려고 하는 입장으로 변화되었음을 설명함
-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운동,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

용하기 편리한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디자인인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소개함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소중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 유형의 다양성과 특징, 장애인에 대하여 가져야 할 바른 인식과 마음가짐, 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함

□ 교육의 기대 효과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사법부 구성원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바, 이번 교육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법원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앞으로도 대한민국 법원은 장애인,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실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VI.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실시

—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양국 공무원 방문 교류 3년 만에 실시 —

■ 한국과 일본 양국 공무원들이 등기, 공탁, 집행 등 관련 제도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사법교류행사가 개최되었음

-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문대영, 이하 ‘교육원’)은 2022. 10. 22.(토)부터 11. 5.(토)까지 2주일간‘제 23회 한·일등기관 등 상호연수’를 진행함(일본 연수, 한국 연수 각 1주일).

■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는 양국의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고, 상호 법률제도와 문화에 대한 양국 공무원의 연구와 이해를 제고하는 국제사법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1999년부터 진행함.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에는 취소,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가, 2019년이 마지막이었던 상호 방문 교류를 2022년 10월 말부터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연속하여 실시

함(한국 측 지도교수로 교육원 문병조 교수, 일본 측 지도교관으로 가와노 마이코 법무성 교관). 아래는 한국 연수에서의 내용임

- 양국 연수생들의 발표와 토론은 ▲부동산등기 1·2, ▲상업등기, ▲공탁, ▲민사집행, 총 5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주제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관한 양국의 차이점, 코로나 상황에서의 등기사무의 방향성, 일본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 제도, 공탁 업무에서의 온라인 이용률 향상, 집행관 제도에 관한 전반적 비교에 관한 것임
- 그 외에 법원행정처의 변순기 법원서기관이 ‘한국 미래등기시스템 사업 현황’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이재석 집행관이 ‘한국에 있어서 부동산 인도집행제도의 정상적 기능을 위한 3대 과

제'에 대하여 각각 특별강의를 하였으며,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과의 간담회 및 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전산정보센터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음. 일본 연수생들은 한국의 선진적인 등기전산화와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힘

■ 문대영 교육원장은 수료식에서“3년 만에 실시된 이번 상호 방문 국제교류 행사가 법제도가 유사한 양국의 공무원들이 서로의 제도와 실무를 비교 이해하고, 상호 관심사를 교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상호연수 제도를 건고하게 발전시켜 양국의 우호증진과 관련 법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Ⅶ. 오석준 대법관 취임



오석준 대법관 취임식

■ 취임식 개요

- 일시: 2022. 11. 28.(월) 14:00
- 장소: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
- 참석범위: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구성원

■ 오석준 대법관(60·사법연수원 19기)은 2022. 11. 28.(월)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면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하였음

■ 이어“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

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라고 밝히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음

■ 경기도 파주 출신인 오대법관은 서울 광성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법원행정처 공보관,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음

■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022. 7. 28. 오후보자를 임명제청하였고, 오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9일 실시되었으며, 임명동의안은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VIII.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23차 회의(임시회의) 개최

－ 사실심 충실화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 방안,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2023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음－

□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대법원은 2022. 10. 12.(수) 09:45 대법원 본관 11층 소접견실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함

■ 신임 위촉 위원 명단

성명	출생년도	현 직책	주요 경력 등	비고
이상경	1965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J.S.D. (사)한국헌법학회 제28대 회장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3차 회의(임시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2. 10. 12. 10:00~17:40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3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23차 회의 안건

- [논의] 사실심 충실화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 방안
- [논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 [보고]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TF 연구·검토 결과 보고
- [논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 [논의] 2023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

□ 제23차 회의 자문의견 관련 주요 결정사항

■ 사실심 충실화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 방안

- 감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재판사무시스템의 감정인 평정표 내용 개선 및 감정인 평정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감정인 후보자의 결격사유와 결격사유 조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서감정과 관련하여서는, ① 문서감정인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② 문서감정인 후보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신체감정 및 검증 제도 개선 방안은 4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연구·검토하도록 함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 제4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법조일원화와 재판제도의 변화에 따른 판결서 적정화 방안’을 회부하기로 함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 제4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방안’,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을 회부하기로 함

■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편재(偏在) 현상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소송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개편하고,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원행정처가 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각종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 2023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

- 2023년 정기인사의 9개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

문회의의 자문 대상으로 함이 바람직함. 위 보직인 사안의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함
- 보직인사안 9개(①대법원 판사연구관, ②사법연수원 교수, ③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④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⑤가사·소년 전문법관, ⑥의료·건설 전문법관, ⑦장기근무법관 선정, ⑧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⑨지원장 보임)

□ 다음 회의 일정

- 제24차 회의(정기회의)는 2022. 12. 14.(수) 14:00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IX.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3 「법관의 길 손지열」 발간



- 법원도서관(관장 윤승은)은 2022년 11월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3 「법관의 길 손지열」을 발간하였다. 이번 3권은 윤관 전 대법원장 편, 이흥훈 전 대법관 편에 이은 것임
-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대법관을 지낸 故 손지열 前 대법관은, 1947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74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처장을 역임하였고 2019. 3. 5. 작고하였다. 선친인 손동욱 대법관은 1973년 대법관에서 퇴임하였고, 그로부터 30여년 후 그 아들인 손지열 대법관이 취임하여, 현재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무이한 부자(父子) 대법관임
- 손지열 前 대법관의 삶을 통해 바람직한 법관의 길을 돌아보고,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당시의 고민을 공유하는 한편,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 발간된 이번 구술총서는, 2017년 6월 3차례에 걸쳐 채록한 손지열 前 대법관의 녹취문을 기초로 하여 관련 자료를 묶은 것임. 법정국장 재임 시 등기전산화

가 필요했던 상황을 언급한 부분이나 재판부 각 층에 1대씩 배정되어 있던 소형 계산기를 나누어 쓰던 에피소드는 당시 사법행정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임

- 법원도서관 <구술채록 사업>을 통해 발간된 이번 책은 각급법원 도서실과 유관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되고, 법원전시관, 사법역사문화전시실 등 법원사 자료상설전시공간에도 비치됨.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의 법률전자책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음
※ 손지열 前 대법관의 육성과 생전 모습이 담긴 구술영상은 법원도서관 유튜브나 e-법원역사관 사이트(history.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음

■ 법원도서관 구술채록 사업

- 국가 주요 인사의 구술기록은 공식 기록물에 나타나 있지 않은 중요 활동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법원도서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 인사 20인의 구술을 채록하였음. 인터뷰 영상과 음성, 사진, 녹취문 등의 자료는 구술기록으로 보존하고, 구술자가 정한 공개 시기와 범위에 맞게 일반에 공개함. 2021년부터는 그 결과물을 담은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음



구술채록 당시(2017. 6.)



대법관 인사청문회 (2000. 7. 6.)

X. 김명수 대법원장, 제1회 아세안플러스 대법원장회의 화상 참가

- 제1회 아세안플러스 대법원장회의가“법원 기술과 사법 접근성: 어려움과 핵심 성공요인”을 주제로 2022. 11. 5.(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음
- 회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어 현지에서 모인 아세안 대법원장회의(CACJ) 국가들과 달리 한국, 중국, 일본은 화상으로 참가
 -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가하여 아세안 각 최고 사법부 수장들과 사법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출국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애도에 동참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하고 화상으로 발표를 대체함
-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의에서“법원정보통신기술과 사법 접근성”이라는 주제로 전자소송 및 영상재판 등 한국 대법원의 발전된 사법정보화의 현황을 소개하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도입한 차세대전자소송, 형사전자소송의 본격 추진 등 향후 계획과 과제를 피력하여 아세안플러스 국가 법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번 회의로 아세안 국가 및 한국, 중국, 일본 사법부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가 간 사법교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아세안 대법원장회의(CACJ)

- CACJ 회의는 2013년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10개국 대법원장이 모여 아세안 국가 간 상호 발전과 사법협력을 도모하고 법치주의 및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위해 설립됨. 2013년부터 매년 열리는 CACJ 회의는 올해 제10차 회의로 2022. 11. 4.(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 CACJ 회원 가입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아세안플러스 대법원장회의

- CACJ 회원국들이 아세안을 넘어 사법교류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협력 국가를 한국, 중국, 일본으로 선정하였고 올해 11. 5.(토) 첫 아세안플러스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



아세안플러스 대법원장회의

XI. 김명수 대법원장,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의 화상 참가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2. 11. 16.(수) ~ 17.(목) 이틀간에 걸쳐 열린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 참석함
- 홍콩 중심법원에서 주최한 회의는 2019년 홍콩사태, 2020년 코로나19로 각 연기되어 올해 화상으로 개최됨
- 회의는 ▲외부 비판에 대한 대응 및 대중과의 소통 ▲현대사회의 사건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정법원 ▲법관교육 등을 주제로 중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를 포함한 32개국의 대법원장 및 최고 사법부 수장, 대법관 등이 참석하여 각 국 사법부 현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하였음
- 이번 회의로 아시아·태평양 각 국 사법부의 비슷한 당면 과제에 대해 서로 인지하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고 사법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 1985년 창설된 지역회의로서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0여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의 대법원장들이 모여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 협력과 교류의 구체적인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회의임
- 2024년 제19차 회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임



법원행정처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Tel. 02-3480-1462

